

보건복지동향

(2006. 12. 20 ~ 2007. 1.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선택 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29일 입법예고하였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원제를 실시하고,
 -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며,
 - 의료급여증을 세대별 종이형식에서 개인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
 -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2007 국민연금 위탁운용 32조 5천억원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2006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를 열고,
 -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 ‘2006년 11월말 기금운용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및 심의하였다.

-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은 2002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06년말 전체 금융자산의 10.2%(19조2천억원)를 차지하며(추정), 2007년도에는 15.0%(32조5천억원)로 13조3천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2007년말의 자산별 위탁운용 비중은 국내주식 53.0%, 국내채권 4.5%, 해외주식 100%, 해외채권 12.7%, 대체투자는 68.5%를 차지하게 된다.
- 공단이 자체 결정하던 위탁계획을 2007년부터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지난 5월 기금운용지침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계획이다.
- 앞으로도 위탁운용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영향력 완화를 위해 투자결정의 분권화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금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논의한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개정안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바꾸는 경우와,
 - 이사·감사의 선임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주주총회 2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006년 11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시가기준으로 188조 807원으로 2005년말 대비 14.7%(24조1,357억원)가 증가하였으며,
 - 금융부문중 국내채권 비중은 78.1%이며, 국내주식 11.0%, 해외채권 8.7%, 대체투자 0.9%, 해외주식은 0.6%를 차지하고 있다.
- 2006년 1~11월까지의 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은 5.69%를 기록하였으며, 12월말까지의 이차수익을 포함한 연환산 수익률은 6.04%로 2005년의 5.61%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주식은 5.11%로 2005년말 대비 종합주가지수(KOSPI)가 3.83%('05.12월말 1379.37 → '06.11월말 1432.21) 증가한 것에 비하여 양호했다.
 - 국내채권은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약 1조5천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5.6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 2006년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지만 해외부문의 성적이 양호하였으며 해외주식 15.92%, 해외채권 6.99%로 국내주식 5.11%와 국내채권 5.60%보다 각각 높아 투자다변화의 효과가 나타났다.

■■■ 장애인 주택환경개선 결과 대체로 만족이 95%로 나와

-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거주 장애인들에게 문턱낮추기, 화장실 개조 등 주택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개선을 완료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 주택개선 대상은 1,050가구며, 이중 약 20%인 203가구에 대해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이 전체의 95.1%로 나타났으며, 여자(97.2%)가 남자(93.9%)보다 3.3%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장애유형별 조사에서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청각 및 기타장애는 100%, 지체장애는 95.1%, 뇌병변장애는 92.6%, 시각장애는 91.3%로 나타남
- 향후, 추가 주택환경개선여부에 대한 물음에 51%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욕구중 ‘접근로의 단차나 턱 제거’가 44.4%, ‘경사로를 완만하게 설치(30.6%)’가 그 뒤를 이었다.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74%로 높게 나타났으며, 거실에서는 안전손잡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보건복지부는 만족도 조사결과 주택환경개선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년도에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응급진료실” 개설

- 국내 최대규모의 국립정신병원인 국립서울병원(원장 장동원)은 2007. 1. 1(월)부터 정신과 응급진료실을 개설하여 정신과 응급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신응급진료실은 공황발작, 급성정신병, 자살충동, 알코올 및 약물남용에 의한 중독 및 금단 현상 등 전반적인 정신과적 응급 상태에 대해 24시간 검사 및 치료서비스를 한다.
- 또한 정신응급진료실은 정신보건법 제26조에 해당되는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호송하여 입원 의뢰된 환자에게 72시간 동안의 응급입원진료를 제공한다.
- 장동원 원장은 “긴급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만성입원 위주인 기존 정신과치료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조기복귀 및 재활로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07년 11월 13일부터 정신응급진료실 시범운영을 거쳐 응급정신진료실을 개소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 서민층의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월 27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 ※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 이와 더불어,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연금, 국내채권 벤치마크 개선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채권 벤치마크를 채권시장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채권투자 대상 신용등급 범위도 종전의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이러한 벤치마크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벤치마크: 운용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지수로서, 투자목표와 전략에 따라 자산군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지수를 사용(예: 주식→KOSPI)
- 2006년까지 국내채권 벤치마크는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의 투자 예정금액 등 운용전략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 시장의 채권종류와 만기별 비중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변경하여 지수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 또한, 국내채권 투자대상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한정하여 안정성을 우선하였으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이러한 국내채권 벤치마크 개선으로 채권운용의 객관성과 수익률 제고는 물론, 투자대상 확대로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서민·중산층 이하 15만명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출산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금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수요자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7천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작년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 ■ 건강보험 심사지침 일제 정비

- 건강보험 심사지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다.
 - “심사지침”이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정수준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는 우선 462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학회 및 단체 의견조회 등 입안예고를 거쳐 심사지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심사지침은 급여기준(복지부장관 고시)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나 명료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나,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으로 역할하고 있어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도 안되고,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다수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 급여기준이란?
 -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적응증, 시술범위 등 급여가 적용되는 인정범위를 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규정
 - 의료행위445, 치료재료 306, 약제 373항목 등 총 1,124항목 운영중('06. 12월 현재)
 - ※ 심사지침이란?
 - 심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장이 공고
 -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472항목의 규정 운영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지난 6개월간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총472항목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하며, 이외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하여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토록 하였다.
 - 특히 금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안)은 그간 의료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불인정 규제를 여러 측면에서 개선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백혈병 치료시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의 경우 그간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급여인정되었으나,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확대된 것을 비롯하여, 골수천자이식법 등 기존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시술기피 또는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하

는 등 다수 급여기준을 확대하였다.

- 이외에도 피부재생연고(스티모린연고), 치은판절제술 인정기준 등 과도한 규제적 항목은 원천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 이렇게 마련된 급여기준개선안은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쳐 의료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세부 의견을 좀 더 수집한 뒤,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4분기 시행 예정)

■ 서민·중산층 이하 15만명 대상 바우처 지급

-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전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 ▲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금년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 46천명은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7천명)에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으로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

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휴면보험금 찾기, 너무 너무 쉬워요!

- 휴면보험금 신규 발생액은 보험계약의 규모 확대와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지급액도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지급노력으로 증가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주소불명과 휴면보험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미지급금 또한 계속 증가하였다.
- '03년 4월 1일~'06년 9월 30일 중 발생한 생보사의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총 97만건)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전체 건수의 9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금액 면에서는 계약만기로 인한 만기보험금이 60.7%로 해약환급금을 상회하였음.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1년 이내에 약 60~70%가 지급되며, 2년이 경과하면 계속 미지급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 '06년 9월 30일 현재 10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가운데 30명을 표본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면보험금 보유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매년 지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았음.
-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여 휴면계좌조회를 요청("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서" 작성)하면, 휴면계좌조회 결과(휴면보험금의 보험회사명, 증서번호, 금액, 문이처 표시)를 현장에서 서면으로 교부함.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또는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공인인증조회)하면, 휴면계좌통합조회 결과를 표시(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은 미표시)함. 휴면보험금이 있다고 확인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휴면보험금은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됨.

■ 복지부, 건강투자를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제시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전염병 관리, 의료재정 관리 등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향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금년('07년)을 건강투자의 원년

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동 대책을 추진하는데 '07년~'10년간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 학교보건은 교육부, 산업보건은 노동부, 이외 운동 등 사안별로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금번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산여성근로자보호 아직 갈길이 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에 위치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간('05.3~'06.2월) 출산한 여성 근로자 총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출산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현재 출산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의 58.2%만이 90일을 사용, 약 41.8%가 법적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휴가일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법적기간인 90일 미만 휴가 사용자가 각각 63.6%와 74.1%에 달하였다.
 - ※ 기업체 대상 조사결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산전후 휴가기간은 얼마입니까'란 질문에 대해 90일 이상이라는 기업체 응답이 37.5%인 반면 90일 이내라는 기업체는 52.9%에 이르렀음.

연초 금연결심, 올해는 365일 쯤~욱 이어가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연초 흡연자들이 금연결심을 많이 하게 되지만, 금연의지가 지속되지 않고 “작심 3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금연결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신년 금연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직장인,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금연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칙을 정리한 미니 금연달력 3만5천부를 제작하여 각 시도, 보건소, 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 1월 17일 11:30~13:30 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미니 금연달력과 금연결심자에 한해 매일매일 담뱃값을 모을 수 있는 금연 돼지저금통을 나눠주는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금연 포토존, 금연홍보물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다.
-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유도를 위한 리플렛 1만5천부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 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들에게 배포되는 리플렛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인한 치아변색, 피부노화 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부각시켜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신년 금연캠페인”을 통해 연초 금연결심을 계속 이어가 흡연을 하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주유원 인력뱅크 본격 추진”

-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수) 오후 2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함재덕)와 협약식을 갖고 민-관 협력사업으로 노인주유원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하였다.
- 한국주유소협회(이하 ‘협회’)는 전국 15개 지회를 통해 주유원 교육에 필요한 강사 지원 및 실습주유소 제공, 주유소 DB 제공과 파견연계, 지속적인 노인채용 주유소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변재관, 이하 ‘개발원’)은 온라인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노인주유원의 모집 및 교육, 파견,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 노인주유원 인력뱅크 사업은 노인들을 주유원으로 양성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력이 필요한

주유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하반기 3개월간에 걸쳐 산업자원부, 정유4사 및 주유관련 협회의 협조 하에 수도권 및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본격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노인주유원 인력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100개소)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247개소)에서 주유원 근무를 희망하는 노인을 모집해 교육훈련을 거쳐 구축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금년 2월까지 인력뱅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4사(SK네트웍스,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및 협회의 홈페이지와 연결하게 된다.
- 또한 2월 중에 참여노인 모집 및 선발, 교육, 파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후 수행기관별로 참여노인을 모집하여 3월 중에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쳐, 2,000명의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금년에 1,000여명의 노인들에게 주유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60억원 가량의 소득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력뱅크를 통하여 노인주유원을 안정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주유소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날 협약식에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인일자리창출에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주유소협회 함재덕 회장은 “이번 사업이 주유원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노인지원팀 031-440-9619, 복지부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6203-6901

■ ■ ■ 보건교육자료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보건소 등 보건교육 활성화 기대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육자료센터소식지 1,500부를 제작하여 전국 보건소와 산업장, 교육청 등에 배포하였으며, 교육 자료의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교육자료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홈페이지에는 보건교육 이슈가 되는 특집기사란, 새로운 보건교육자료를 담은 자료소개란, 보건교육현장을 담은 세상현장뉴스란과 그 이외 새로 나온 보고서란, 국외보건교육 동향란등

5개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보건소, 산업장 및 교육청 등에서는 인터넷을 활용, 동 교육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지역주민, 직장, 학생 등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우수한 교육자료도 수집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자료센터에 접속하면 보건교육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접속방법은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자료센터(<http://herc.hp.go.kr>)로 접속하면 자료의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한 달간 다운로드수가 많은 자료와 검색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보건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문의 : 보건정책팀 02) 2110-6296, 복지부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9

■ ■ ■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국어판 한국생활 안내책자 발간

- 보건복지부는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등으로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라는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 책자는 관계부처의 각종 제도와 시책을 종합하여 여성결혼 이민자의 모국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제작하였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이주여성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에서 부터 한국생활을 정착 하는데 필요한 각 영역별 각종 시책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소개하였다.
- 책의 내용은 체류와 국적, 한국사회 이해하기, 여성과 건강,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건강, 자녀교육, 일과 직업훈련,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장,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생활보장, 여성인권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앞으로 안내책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보제공 수요를 파악하여 안내책자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 ■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3만8천여세대 압류재산 공매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세대중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0개 직종) 종사자(255명, 9억원)와 재산있는 고액 체납자 37,649세대(체납금액 1,229억원)에 대하여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체납보험료를 연내 1,000억원을 징수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하여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하였다.
- 아울러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하여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2006.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이다.